

키워드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전문적 기술 습득 등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상,하반기 구분 실시)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9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세대로 재산 4억 8천만원 이하 및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민
 - 사업 형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직접일자리 창출
 - 사업유형
 - 지역자원 활용형 :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자원재생, 관광자원 활용사업
 - 지역기업 연계형 :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 서민생활 지원형 :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 지역공간 개선형 :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희공간·시설활용 사업



이동합니다



■ '25년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속도감 있게 마련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고용동향 및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24년 12월 취업자수가 △5.2만명 감소하는 등 경제심리 악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건설 등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각 부처가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일자리 정책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청년·소상공인 등 고용약자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올해 1~2월의 고용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신속집행 관리 대상을 선정(136개, 16.2조원)하고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43%를 집행하겠다.”면서,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1월 중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64.5%(79만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고양시의 일자리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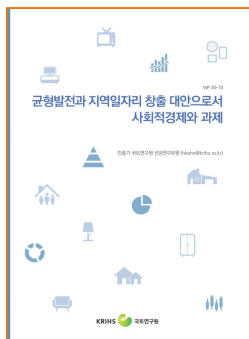
보도자료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결과 (통계청, 2025. 1. 16.)

용인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인천시, 2025.)

고양시,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고양시, 2025. 1. 9.)



연구자료

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와 과제

국토연구원 안흥기



참고자료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고용노동부